

최상목, 계엄 후 휴대전화 교체…“안바꿨다”→“바꿨다”

법사위,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권한대행 시절 공방
내란 가담 의혹·마은혁 재판관 미임명·미국 국채 매입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통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대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또 최 부총리는 미국 국채 투자 논란과 관련해 “소극적 포트폴리오 추천을 받아 작년 8월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결국 최 부총리가 헌법기관을 형제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도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언급하며 “계엄 관련 재정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음을 인지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조현실적인 상황이었어서 제가 받은 자료에 관심도 없었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고 대답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파국이 오기까지 탄핵을 30번 하는 등 얼마나 많은 수단을 동원했는지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라며 “최 부총리 탄핵은 ‘스토킹 탄핵’이다”고 반격했다.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에서 최 부총리를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던 국무위원들을 내란 동조라고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변경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라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교체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통신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2024년 12월 7일에 핸드폰 기기를 바꿨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핸드폰이 고장 나서 지금 새 핸드폰을 쓰고 있다. 고장 난 핸드폰도 갖고 있다”며 “위증할 의도는 없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켜 그 부분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미 국채와 관련 “2018년 민간인 때부터 갖고 있던 외화 예금을 미국 국채로 전환한 것”이라며 “환율 변동과는 관련이 없다.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달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최 부총리는 1억9712만원 상당의 30년 만기 채권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017년 공직 퇴직 후 자녀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듬해 달러를 보유하게 됐고 보유 달러로 지난해 중순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기 위해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당연한 결정”…국힘 “매우 유감”

한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총리실 “헌재 결정 존중”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며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형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한 총리는 윤석열 등 내란세력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헌행위를 했다가 헌재에 의해 사실상 파면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에 하기 바란다”며 “괜한 일을 벌이지 말고 공정한 대선관리에 주력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한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재판의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지정된 것과 관련해 “마 재판관은 특정 성향에 치우친 판결과 언행을 반복해 좌편향 논란을 빚어왔다”며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오늘 판결에 마 재판관이 판단을 가정한 사법적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시는 것 아니냐”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에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의 종국 결정 신고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구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연합뉴스

“동북댐 주변 개발? 수질 악화 초래”

‘김영록 지사 제안’ 반발…광주시의원 전원 입장문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을 만나 화순 동북호 인근 지역 개발을 거론하며 관련법 개정을 제안한 것을 두고 반발했다.

16일 광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민의 식수원인 동북호의 규제 완화 제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김 지사가 지난 15일 환경부 장

관과의 면담에서 상수원 규칙 개정을 제안하자 나온 반응이다.

김 지사는 동북댐 주변 박물관·전시공간, 관광 객을 위한 카페 조성 등을 위해 규칙개정을 건의했다.

시 의원들은 “(김 지사가) 행정구역상 관할권을 근거로 환경 현안을 건의한 점은 이해하나, 상수

원 인근은 보호구역으로 개발대상이 아니다”면서 “광주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 식수원의 본질적 가치가 달려 있는 생존권 문제로 단 1%의 오염 가능성도 용인될 수 없는 생명선이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김 지사의 제안이 광주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일방적인 제안은 양 지자체(광주시·전남도)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환경부는 실질적인 수질관리의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수질 보전과 생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해외플랫폼 업체 국내 대리인 책임 강화

조인철 의원,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이 16일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과정 등에서 해외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국내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2018년 도입됐지만, 애초 취지와 다르게 국내 대리인이 사고 발생에 즉각적,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개정안은 방통위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제도 운용 및 방통위 보고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방통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국



내 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 등 우리정부가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면, 해외 업체는 이를 ‘언제, 어떻게’ 조치했는지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은 우리정부의 시정명령에도 해외 업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조인철 의원은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을 통해 불법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현실에서 형식적 대리인 제도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며 “대리인은 있지만, 책임은 없다”는 비판이 높은 기존 제도를 바로잡아 플랫폼의 실질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